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정책본부

차 례

■ 인 사 말	
■ 국가보안법	4
■ 과거사진상규명	7
■ 안보대책	13
■ 경제살리기대책	18
(1) 정기국회 추진 한나라당 세제개정안	
(2) 서민경제대책	
■ 쌀개방협상대책	27
■ 재래시장육성	32
■ 공정거래법	36
■ 편파방송 현황 및 대책	42
■ 교육대책	44
■ 국민연금개선방안	46

참고자료

(1) 악화된 민생지표 및 서민생활지표	48
(2) 노대통령 헌정훼손 발언록	57
(3) 노정권 실정 비판 연설 참고자료	61

인사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민생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17대 정기국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열려 오는 12월까지 100일간 지속됩니다.
특히, 10월 4일부터 20일간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안전,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기국회
와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현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국가불안과 국론분열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좌파적 정책을 추
궁하겠습니다. 대외주권 포기, 군과 경찰의 사기 저하, 검찰독립·방송독립, 수도권 안보
불안 등을 집중 제기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실상과 서민 죽이는 정책, 미래준비 및 선진화 정책 소홀, 의료개혁을 평가하
고, 재정파탄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 붕괴를 질책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체계, 식약품의 강력한 안전 관리, 치안 관리, 재난 복구 체계 등을 점검하
겠습니다.

**넷째, 수도권전 졸속 추진에 대해 재원, 통일 대비, 국토의 불균형성, 역사성 등과 연계하
여 각 분야별로 철저히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2004. 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

제1 정조위원장 공성진	제2 정조위원장 황진하
제3 정조위원장 유승민	제4 정조위원장 최경환
제5 정조위원장 이균현	제6 정조위원장 이계경

「국가보안법」

— 폐지 반대! 적극 개정! —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문제점

1. 남북 대치상황 하에서 안보 및 국가정체성 상실 위험

- 평화 무드가 깊을수록 상대를 이완시키기 위한 공작 활동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사실과 아무리 강력한 안보형사법적 체제를 갖추고 있어도 간접침략은 막을 수 없음. (통독 전 서독 내 암약한 동독 공작원들의 실상이 대표적 사례)
- 우리가 도저히 수궁할 가치가 아니며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북한 사상을 확대 전파하는 일을 국보법 없이는 막을 수 없음.
- 구체적 가상 사례
 - ▶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권유(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가입 권유 혐의)해도 처벌 불가
 - 현행 헌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제 92조, 99조)상으로는 처벌 불가
 - ▶ 주체사상 전파 목적 연구소 개설(국보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해도 처벌 불가
 - 현행 형법(제 87조)상 주체사상을 퍼뜨려 남한 혁명론을 부추기더라도 폭동 수준이 아니면 처벌 불가
 - ▶ 김일성 추모 집회 개최(국보법상 찬양고무 혐의)해도 처벌 불가
 - 현행 형법상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고 폭동 단계까지 가지 않는 한 처벌 불가

2. 북의 대남 적화노선 강화 및 남남갈등 조장 우려

- 남한 내 폐지론자들과 북한의 주장이 대동소이하고, 특히 북은 우리 국보법처럼 독소 조항을 가진 惡法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런데 북한 형법에는 북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인 죄형법정주의 파괴적 규정이 13개 항이나 있으며, 유추해석 허용(제 10조), 불고지죄(제 54조), 연좌제 인정(제 70조), 공소시효 불인정(제 17조, 60조) 등이 있는데, 북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폐지론은 북(김정일)의 ‘연방제 통일’ 염원의 결과라 보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음.

여당 대체입법 추진의 문제점 - 사실상 「국보법」 폐지 전략

- 국민여론이 「국보법」 폐지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므로 열우당에서도 폐지보다는 ‘대체입법’ 주장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 열우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우당의 대체입법 안을 보면 「국보법」이 담고 있는 핵심 조항을 다 삭제한 것임
 - 대체입법이라는 포장을 이용한 「국보법」 폐지 전략의 일환임.
- 남북을 은밀히 드나드는 ‘잠입·탈출’ 행위, 북한 공작원과 비밀스럽게 만나고 연락하는 ‘회합·통신’ 행위, 주체사상과 북한의 주의·주장,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찬양·고무’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친북세력에게 합법적인 1차적 친북활동의 공간을 허용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따라서 열우당의 「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 주장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일반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내용임.

한나라당의 입장 : 「국가보안법」 개정

- 한나라당은 「국보법」개정 관련하여 의원총회에서 수차례 당론 수렴과정을 통하여, 「국보법」폐지는 절대 반대하며,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대체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부분은 개정하더라도 존치하고, ‘불고지 조항’은 전향적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음.

※ 「국가보안법」 관련 여론동향

국민여론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가 압도적

< 국가기관 >

-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폐지 권고(8. 24)후 개폐논쟁 폭발
- 헌법재판소, 「국보법」합헌 결정(8. 26)
-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확정 판결하면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합헌적 법률임을 강조(8. 30)

< 국민여론 >

- 중앙일보 여론조사, 개정 보완 66%, 완전 폐지 14%, 현행 유지 16%(9. 6)
- 인터넷 야후코리아 온라인 투표, 개정 37.7%, 폐지 24.3%, 현행 유지 38.0%(9. 7)
- 동아일보 여론조사, 일부 개정 57.2%,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보완 35.4%(9. 11)
- 사회지도급 원로 1천6백여명이 「국가보안법」폐지를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
- 김수환 추기경, 법장 스님, 길자연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폐지를 반대

과거사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

—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과거사기본법」에 대하여—

■ 진행상황

여당, 반대여론 높아 11월로 국회 처리 미뤄

- ‘친일진상규명법’ (개)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
 - 동 개정안은 김희선 의원(열우당) 대표발의로 7. 14일 제출
 - 7. 16일 행자위에 회부되었으나, 동 법안의 발효일이 9. 23일이므로 시행 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상정은 되지 않고 있었음
 - 9. 6일, 의안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에 맞게 양당 간사간 협의 계속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시한 채 여당만의 단독 표결(민노당 1인 포함)로 안건 상정(민주적 절차 무시)
 - 9. 1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체법률(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상정 후, 대체토론 실시
 - 9. 20일 공청회 개최,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심의, 전체회의 의결 등 절차진행 예정
- 열우당, 가칭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사기본법) 초안 마련
 - 초법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 제출을 연기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청취를 더 하겠다고 한발 물러섬

■ 문제점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과거사기본법」은 반인권악법

- 여당의 두 법안이 모두 헌법 파괴와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음
 - 두 법안이 모두 조사기관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거부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위배됨
 - ‘친일진상규명법’은 보고서 작성 전에 혐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좌제 금지 위반
 - ‘과거사기본법’은 조사 착수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공소의 제기 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과 배치(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
-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인권침해 조항을 고집하는 아이러니
 - ‘과거사 기본법’은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것이나, 조사대상자의 인권은 완전 무시
 - 조사대상자가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불문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3년이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사대상자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는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 입회가 가능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방어권’이 강조되는 현 추세와도 상충됨
- 조사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불가능
 - 친일 진상규명과 과거사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모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도록 함(국회 동의 절차는 있으나, 추천절차 없이 모두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음)
 -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역사 규명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세계관과 시각이 반영된 편파적인 역사 해석의 장이 될 우려가 높후, 여기에 야당 죽이기 등 정치적 목적까지 개입된다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것임

■ 한나라당 입장

*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 국회 제출

- 조사대상 범위 확대, 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에 설치

* 「현대사조사기본법」제정 추진

- 현대사정리위원회 구성, 위원회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소 설치

○ 여당이 진정한 과거사 청산 목적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음모가 분명하다는데 문제가 심각

- 노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신호탄으로 하여 여당과 일부 여 편향적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순위의 국정과제인양 정치쟁점화한 것임

- 전 국민을 양분하여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갈 위험이 상존

○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음, 그러나 진상 규명 주체는 정치권 보다는 역사가 등 객관적인 학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사를 공권력이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정략이 개입되어 새로운 역사 조작 · 왜곡 가능성이 상존함.

○ 과거사 진상규명은 많은 시간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안

- 열우당처럼 시간에 쫓기 듯 서둘러서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국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십상

-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대통령의 자의적 선발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필요(예, 엄격한 자격 조항을 법률에 명시, 여야당의 동수 추천, 정치권 · 시민단체 등의 회피인물 지정 등)

○ 과거사 진상규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파괴와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혁명입법이나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임

-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못할 게 없다는 발상은 오만이며 독선임
→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발상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 여·야 비교

구분	열린우리당(김희선의원)	한나라당(유기준의원)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확대 - ‘중좌’(중령) 이상 → ‘소위’ 이상 - 문관은 ‘군수’ 이상 - 경찰은 ‘경시’ 이상 - 청씨개명 권유자 - 신사조영위원 -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자 -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확대 - ‘중좌’(중령) 이상 → ‘소위’ 이상 - 문관은 ‘군수’ 이상 - 헌병 및 경찰은 계급 명시 삭제 -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자 -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의 중앙뿐 아니라 지방간부도 포함
진상규명위와 위원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둠 - 위원장, 상임위원2 등 9인의 위원회 구성 - 기존 법의 국회 추천 조항과 위원 자격요건을 삭제 →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에 설치(독립된 민간기구) - 위원 자격은 대학교수 10년 이상, 법조계 10년이상,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 - 국회에서 위원 추천 - 기존법의 친일·친공 관련자의 위원 참여 배제 조항 존치
조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그밖의 관계자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열람 요구 -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 명령장 발부 반대 - 인권침해와 사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
조사내용 공개 ·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자의 명단 발표 - 기존법의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및 해당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 위원회의 조사내용 공개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 ○ 기존법 3년 → 5년으로 연장, 6개월 범위내에서 2회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조사가 끝난 뒤에만 결과를 발표, 중간발표시 처벌 ○ 허위고발, 무고등을 막기위해 무고자에 대한 처벌과 비밀누설죄 조항을 존치

과거사규명 법안(초안) 비교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명칭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현대사 정리를 위한 기본법
진상규명 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위원장 포함 위원 15명) ○ 위원 자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 ▶대학부교수 이상 직위에 8년 이상 재직자 ▶명망있는 시민운동단체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정당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학술원 산하 현대사 조사위원회(7명) ○ 위원장, 상임위원은 국회 추천해 학술원장 임명, 위원은 학술원·국사편찬위·광복회·역사학회·대한변협에서 1명씩 추천 ○ 위원자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재직자 ▶역사전공 교수 경력 10년 이상 재직자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등 역사분야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자
진상규명 기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관계기관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음) ○ 관할 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의뢰권, 동행 명령권, 통신·금융정보 요구권, 고발·수사의뢰권, 사면·감형·복권건의권, 청문회 개최권 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 불응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행명령권, 통신·금융정보 요구권, 고발·수사의뢰권, 청문회 개최권 등 없음
진상규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및 폭력 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해방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의심사건 ○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하 항일운동 ○ 민족 정기 높이 해외 운동 ○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 ○ 친북 이적 활동
조사기간 공표 및 홍보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활동 후 2년간 연장 가능 ○ 조사종료 사건 지체없이 대통령·국회에 보고후 결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간 활동 후 3년간 연장 가능 ○ 조사 결과는 관보에 게재 ○ 조사과정 공표 금지

안보대책

■ 현 정권의 안보 실상 및 문제점

▲ 주적개념

- 북한은 지난 9월 18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 개발 계획과 관련된 회담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오는 10월 발간예정인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 폐지하고 대신 ‘군사위협’, ‘실체적 위협’ 표현 사용 추진
- 국방부는 주적 표현 문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백서 발간을 중단했으며, 2003년에는 주적 표현으로 인해 국방백서가 아닌 '국방정책'을 발간했음
-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주적 개념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자칫 국민 안보불안 가중 및 일선 장병들의 대적관 해이 초래가 우려됨

▲ NLL 무력화

-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남북은 서해상 교전방지 위해 남북간 교신합의 및 군사분계선 선상에 있는 선전물 등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은 휴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를 지난 7월 16일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합정간 상호교신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특히 북측의 NLL침범 횟수가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용통신망’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상황(지난 6월 18일 이후 한달간 북측은 우리 측의 43회 호출에 20회만 응답)

- 급기야 지난 7월 14일 NLL을 침범하는 북 함정에 대해 우리 해군이 경고 함포사격을 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이후 국방부가 군 작전예규를 수정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음. 국방부는 작전예규 변경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장성급회담 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군이 남북관계 등을 의식해 작전예규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 합참의 작전예규 변경은 최전선을 지키는 초병더러 적의 작전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반격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

※ ‘서해상 교전예규’ 변경사항

- 2002년 7월 서해교전 이후 :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 → 경고사격(시위기동 불응시 즉각 경고사격) → 격파 사격
- 2004년 8월 : 경고통신(경고발송) 및 시위기동 → 경고사격(NLL을 침범한 북 선박이 선박구조 등 NLL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 경고사격 자제) → 격파 사격

▲ 주한미군 감축

- 이종석 NSC사무차장은 지난 5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무조건 안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언급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스스로의 전략이다. 한국도 너무 남에게 오래 기대 있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린다고 안 갈지도 갈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다”라면서 “10년이 가면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것이다”라고 언급. 결국 ‘자주’ 강조해 주한미군 감축 초래한 것 자인한 셈

- 지난 6월 6일 리처드 몰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천 6백명을 포함해 총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통보. 미국측이 주한미군 감축 사실을 ‘협약’이 아닌 ‘통보’ 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균열 징후

-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시대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월례 조찬회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기본적으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반미시위 등)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 앞당겨 졌다”고 발언해 국내의 반미분위가 주한미군 감축을 앞당겼음을 인정

▲ 한미동맹 약화

- 현 정권은 ‘자주국방’, ‘자주외교’ 등 ‘자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한미동맹 약화 초래

- 동맹약화로 이라크에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본은 핵심동맹, 한국은 가치있는 민주동맹)이며, 특히 지난 9월 9일의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은 한미동맹 약화에 따른 결과

- 양강도 폭발사고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14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외에 다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 비슷한 시각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발전소 건설용이라는 북한의 설명은)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한미간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軍 문민화

-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9일 취임식에서 “현역 군인을 국방부에서 내보내고 민간인으로 채우겠다”며 이른바 ‘국방부 문민화’ 선언

- 윤장관은 지난 9월 18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달(10월) 말 국방부 문민화를 위한 로드맵이 확정되면 민간인과 고시 출신 우수 공무원들의 영입 등 이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해 국방부 인력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발언

- 이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요직을 독점하고 인사와 작전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군의 불안과 사기저하 초래

- 사병 내부반 개선 조기화 및 사병 봉급 현실화 폭 상향조정

- 제대군인에 대한 주거 및 취업 대책 강구

■ 대책방안

▲ 한미동맹 강화

- 한·미 우호관계 발전적 보완
 - 한·미간 의원외교 활동 통한 동맹강화 노력 등
- 기존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 지속 발전
- 한반도 안보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
 - 동북아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강조
- 주한미군의 안정적 재배치에 적극적 협조

▲ 국방력 강화

- 국방예산 지속적 증액(GDP대비 3.2% 선으로)
- 군의 첨단화·과학화·정보화 조기 추진해 강한 군대 육성
- 군의 구조개혁(병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으로) 추진

▲ 軍 사기 진작

- 군의 애국헌신에 대한 명예 고양 및 철저한 보상대책 마련
- 무리한 군 문민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현역 군인들의 사기저하 방지
- 직업 군인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예산 배정

경제살리기 대책

정기국회 추진 한나라당 세제개정안

- 서민과 중산층의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 -
감세로 인한 총국민혜택(추정) : 약 5조원 + α

□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IMF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느끼고 있음.

- 특히 서민·중산층은 소득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데, 돈 쓸 곳은 많고, 높은 세금 때문에 소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 제조업 가동율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기업할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국내를 등지고 떠나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음.

□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최악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강 건너 불 보듯하며, 말로는 경제살리기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정리 등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이슈를 제기해 국론만 분열시키고 있음.

□ 지금 국민 모두가 소비할 의욕을 상실한 지금 정부지출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정부와 여당이 급할 때면 들고 나오는 현실과 거리가 먼 제한적 감세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에 불과할 뿐임.

□ 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이 확실히 늘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적인 감세정책 필요

□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완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대규모 세제지원안을 마련해 우리경제가 내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트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대표적인 세제지원안〉

- 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율 차등 인하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국민연금료·의료보험료·이동통신비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 ②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인하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 이미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 ③ 택시와 장애인용 LPG 특소세 및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택시와 장애인용 LPG 특소세 50% 감면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既제출되어 있으나 100% 감면 수정안(박계동의원 대표발의)으로 추진 예정
 -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추진
 - ④ 에어컨·PDP·프로젝션TV 등 5개 항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소비활성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부·여당에서 특소세 폐지안을 제출한 골프용품, 모터보트, 보석, 고급가구 등 사치품에 대하여는 특소세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⑤ '사업의 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안 마련중
 -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절실
- ⑥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 ⑦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효과 제고

한나라당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유류세 대폭 인하

개정내용	개정이유	감세로 인한 국민혜택	비고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가 35달러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 10% 인하 ※교통세의 경우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세부담 완화 가정용 LPG의 경우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고, 주로 저소득층에서 사용 	약2.1조원	박재완 의원 발의안 국회 제출
택시 및 장애인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부탄에 대한 세수 : 약 6,000억원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		※ 프로판에 대한 세수 : 약 1,200억원	재경위 심의 시 수정안 제출

■ 5개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및 중소형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

항목	현행	개정 내용	개정이유	감세로 인한 국민혜택	비고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 제품	20%	폐지	대중화되고 있고, 에너지 관련 제품 이지만, 기술발전 으로 에너지 효율 이 높아지고 있음	약 3,600 억원	9. 20일 국회 재경 위 통과 9.22일 국회 통과 예정
영상기·촬영기와 그 관련 제품	20%	폐지	디지털 신기술 개 발과 첨단산업 육 성, 소비활성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약 480억 원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	8%	폐지			
플라즈마 영상표시 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	8%	폐지			
고급사진기 (200만원 이상 초과금액)	8%	폐지			추후 논의
자동차 2000cc이하	5%	폐지	내수진작 및 경기 활성화		재경위 심 의시 수정 의견제시

서민경제대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가정 -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1. 서민경제 비상시국이다

■ 경제파탄

-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03년)
- 생활물가 급등, 전년 동기대비 6.7% 올라('04.8)
- 신용불량자 374만명('04.5)
※ 현 정권 출범 '03년 3월(295만명)보다 80만명 증가
- 개인파산신청자 사상 최대 : 상반기에 3,759건 신청
- 가구당 빚 약 3천만원('04.6말 현재)
- 전국 가구의 27.7%가 적자 운영(2004년 2/4분기)
- 체불임금 환란 이후 최대수준

■ 해체 위기의 한계가정 실태

- 건강보험료 못내는 가구 153만세대(약 600만명) : 지역가입자의 17%
- 절대빈곤인구는 470만명인데, 의료보호 받는 사람 145만명뿐, 아프면 병원도 못가
- 전기요금 체납가구 90만에 육박, 단전가구 7월까지 약 5천가구
- 서울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99년 이후 최고, 전년대비 연체율 2배 (가구수의 5% 초과)
- 금년 전화요금 체납자 320만명

- 국민연금보험 미납자가 385만명,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364만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월 4-5만원 수준) 체납 가구 증가
 -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말 체납가구수 넘어서(총 14만여 가구 가운데 5,549가구가 체납)
-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 크게 증가(서울시 교육청)
 - 올 2/4분기 결식학생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7만3,333명
 - 특히 중학생은 '03년 16,303명에서 20,172명으로 24% 증가
- 국세청 세금체납 압류재산 사상최고 : '04년 7월 현재 6,653건
- 법원 경매매물 2배 이상 급증: '04년 8월 4만여건
 - 서민주거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법원경매 물건 급증(55%증가)
- 자살인구 13,005명, 이중 53%가 빈곤 관련('03년)
- 해마다 이혼가구 1-2만 증가 : 올해 18만건 예상, 이중 16.4%가 경제문제에 기인

2. 서민가정 보호를 위한 대책

가. 당 감세정책 법안관철 : 총 국민혜택 약 5조원 수준 상회

- 자동차 유류세 인하 : 한시적으로 10% 인하(약 2.1조원)
- 택시 및 장애인용 LPG 특소세 감면
- 가정용 LPG 특소세 감면
- 에어컨·PDP TV·영사기 등 특별소비세 폐지
- 2000cc 이하 자동차 특소세 폐지(현재는 4% 탄력세율 적용)

-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세무조사 면제

- 법인세 인하(약 4,600억원)

- 소득세 인하(약 1.9조원)

-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나. 한계가정 보호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예비비) 추진

-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유지와 계층간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
- 특별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단전·단수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한계상황에서 해체위기로 내몰리는 서민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새해 예산에 '특별예산'을 편성, 직접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 목표액 : 한계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비비 2조원을 별도로 마련 (재원은 불요불급한 국책사업 조정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10%절감 예산' 등을 활용)
 - *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
 - 2003년 11조 1,266억원
 - 2004년 12조 1,551억원 (전년대비 1조285억, 9.2% 증가)
- [범국민적 협의기구 구성 : '특별예산' 2조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 안에 가칭 <한계가정보호국민협의회 / 또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 국민적 동의 하에 사업추진
- 한계가정 등 실태조사 : 위 범국민협의기구 주관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한계서민가정의 실태를 조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2조원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 의결토록 함
- 예상되는 주요사업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
- 단전·단수·건강보험사각지대·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되, 부처별 대책을 종합관리

3. '2% 나눔운동' 전개

가. '2% 나눔운동'의 의의

- 정부, 기업, 국민, 정당 등 모든 주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 이상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운동
예) 돈, 자원봉사, 재생물건 등
- 양극화 현상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신뢰 강화의 계기 기대

나. 전개방식

- 1단계로 한나라당부터 먼저 운동에 착수
 - 의원세비 등 전당원이 수입의 2%를 나누는 운동 실천(공동모금 방식 혹은 각자 자발적으로 실천서약서를 작성)
 - 자기 시간의 2% 나누기 운동 전개,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 2단계로, 당의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후 우리 사회의 원로, 종교인,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결성,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
- 3단계로 대기업, 사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검토.

다. '2% Day' 실시

- 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매월 2일을 '2% Day'로 설정, 상대정파에 대한 비난 등 일체의 정치적인 언급을 중단하고, 이 날은 비정치적인 봉사활동 등 '나눔운동'에 당력을 집중

쌀개방협상 대책

1. 현황

- 올 생산량은 평년작만 되어도 250만석 수준의 추가재고 발생등 공급과잉
 - 공급 : 3,593만석(평년작 3,450만석 + MMA 143만석)
 - 수요 : 3,319만석 추가재고 : 274만석
 - * 1인당 소비량: 03년 83.2kg 최근 3년간 평균감소율 3.5%
- DDA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확대 및 시중쌀 가격하락등 충격은 불가피
 - 관세화유예 경우
 - MMA물량이 많을 경우 재고관리등 문제 해마다 발생
 - 일정물량 시판등 관리방식 변화우려
 - * 쌀협상에서 상대국들은 소비자시판과 민간수입허용을 계속 요구
 - 관세화 경우 - 수입량 예측곤란 및 시장혼란, 농민들의 영농의지 상실등 사회문제 대두
- 보조금감축에 따라 농가소득지지 및 수확기 물량흡수기능은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
 - * 쌀관련 감축보조금(AMS) : 95년 2조344억원 04년 1조 3,598억원
 - 수매량 : 95년 960→00년 629→03년 521→04년 516만석

2. 문제점

- WTO협정 체결이후 적어도 10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쌀시장이 개방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에 대한 대비노력이 거의 없었음.

- 국제적인 기상이변과 식량무기화 추세와 관련된 식량주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쌀농업·쌀농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오히려 쌀농업을 포기 상태로 내몰고 있음.

■ 추곡수매가 4%인하 추진

- 정부는 쌀개방에 대비(국내외 가격차 축소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곡수매가를 인하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 쌀개방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이 없음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 정부는 쌀협상 이후의 여건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하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매입가격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추진

-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확기 물량흡수를 통한 시장안정기능과 소득지지 기능이 약화.

- DDA협정 이행은 빨라도 2008년 이후에나 가능.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감축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양곡관리법개정은 DDA타결 이후 추진해도 무방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음.

■ 쌀전업농육성 계획의 문제점

- 정부는 2010년까지 6ha수준 쌀전업농 7만호 육성,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

-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쌀값하락 및 쌀농가 수익성 저하로 쌀전업농이 더 큰 타격을 우려가 큼. 고가의 농기계이용 및 농지 확보비용 등으로 농가부담 확대와 수익성 저하로 과도한 채무에 허덕일 가능성이 많음.

- 대다수의 중·소규모 쌀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육성대책이 없고 상대적으로 푸대접하거나 영농포기를 유도하고 있음

3. 한나라당의 입장 및 대책

-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가 4%인하 반대.

- 쌀의 국민식량이나 농가소득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비축제 도입시에도 쌀수급 계획과 매입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관철

■ 확실한 농가소득보장대책 및 쌀시장 안정화 방안 동시 강구

- 직불금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 농가소득중 직불금 : 한국(1.9% 03년), 미국(19.8% 00년), 일본(17% 00년)

- 농업예산중 직불금 : 한국(8.3% 04년), 미국(36% 01년), 일본(13% 01년)

- 외국쌀 수입대비, RPC 적극지원과 활용으로 국내 쌀유통망을 선점

■ 농가경영안정 직불제 도입시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추진

* 미국의 경우 목표가격을 의회에서 결정

■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법제화 추진중 (한나라당 김영덕의원)

■ 지원단가·지원대상확대등 농어업재해지원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에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구호”차원의 지원에 머물고 있음.

■ 농촌인구 유입 종합대책 마련

농촌살리기의 핵심방안중 하나로 설정

젊고 의욕이 가득찬, 활기있는 젊은 영농인을 유치할 환경조성

* 교육 의료 연금등 복지차원 대폭 확충

한국농업전문대학과 농협대학을 통한 농업경영 전문 CEO 양성

농업·농촌 119조 투·융자 계획의 실체

1. 현황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1월 11일 제 8회 농업인의 날 연설에서 농업발전과 농민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향후 10년간 (2004-2013) 총 투·융자 119조원 내역 연도별 04년 8.4조원에서 08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

* 조달재원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재원지출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2. 문제점

- 119조 투·융자사업 졸속추진
 - 119조 투·융자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발표한지 2개월도 안되고 완전한 계획도 없이 2004년에 10개년 사업을 추진
 - 사업시작이 2004년도이며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발표는 04년 2월임. 이는 엄청난 장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발표에 구색 맞추기로 급급했고 또한 농촌 농민들의 사할이 걸린 쌀협상 DD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졸속 발표되고 추진된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제대로 입안이 안된 엄청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낭비되는 국민혈세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생색내기용에 불과
 - 얼핏보기에는 10년간 119조를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나, 10년간의 농업예산중 채무상환,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89조(119조의 75%)이고

실제 추가적인 순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2003년도 총예산 14조 2천억원 일반회계 5조 3천억원임을 볼 때 거창한 농업·농촌10개년계획이 없더라도 10년간 80조가까이 투자될 것으로 분석
- 또다시 농민은 빚더미에 앉을 우려
 - 30조(119조의 30%)는 농민에 대한 융자로서 결국 빚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또 다른 빚더미에 앉힐 우려가 있음
 - 92-02년까지 82조원(지방비10조원, 자부담10조원 포함)을 투·융자했으나, 농민들의 빚은 늘고 농촌은 더욱 파폐했음

3. 한나라당의 입장

- 지난 농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명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는 중장기대책을 농업·농촌기본법 등에 명문화하는 등 확실한 추진의지를 표명할 것
- 한나라당은 119조 투·융자 계획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을 살려 세계와 싸워서 이길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독려할 것임

재래시장 육성

1.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제정

□ 특별법 제정 배경

- 경기침체, 유통시장 개방 등 지역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
- 기존의 지원시책 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시책들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상인들의 요구에 부응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래시장 육성·발전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기여

□ 특별법 제정 방향

-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성장
- 시장상인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 재래시장 시설·환경 인프라 현대화 지원과 시장 및 시장상인 경영혁신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주요내용

▶ 재래시장 지원 정책역량 강화

- ① 법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장기적, 체계적 지원 도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시행.
 - ② 재래시장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재래시장과 사실상의 재래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골목시장 등도 정책 지원대상으로 흡수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③ 정부로 하여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의무 부여
 - 재래시장 실태 조사,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협조 조항 규정.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시장 육성계획 수립 시행
 - 지역실정에 따라 재래시장을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⑤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 시설현대화 자문, 경영혁신 자문, 상인 상담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⑥ 대규모점포(할인매장)의 재래시장 협력 지원
 - 대규모 점포로 하여금 재래시장과의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의 촉진
- ①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 지원
 - 비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관광거리 조성 등 공동시설의 설치·개량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 ② 시설현대화 사업시 국공유부지 사용 및 도로점용료 면제
 - 도로법에 따라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면제 특례 규정.
 - ③ 시설현대화 추진시 임차상인을 보호
 - 점포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시장 우선 지원.
 -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후 종전 입주상인 우선 입주 배려.

- ④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 시설현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 및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 ⑤ 재개발·재건축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 지원
 -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구역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과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도모.
- ⑥ 시장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위해 특례 적용
 - 시장정비사업시 토지 등의 소유자 3/5 동의로 사업 가능.
 - 용적율은 700% 이하,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이하의 범위로 특례 규정.
 -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특례 규정(중전 2배이하→4배이하).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시 특례.
 -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 특례(토지건물 소유자 4/5 동의로 가능).
 -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후 시공사 선정 특례.
- ⑦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입점상인 대책 마련
 - 입점상인 임시시장 마련, 임시시장 불가시 영업손실 보전, 정비사업 완료후 우선 입주 등.

▶ 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 ① e-비즈니스 등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정보네트워크, 온라인 쇼핑물, 전자 상거래 구축 지원.
- ② 재래시장 공동사업의 활성화
 -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과 공동구매, 공동물류·배송 체계 구축을 지원.
- ③ 경영교육 및 지도
 - 경영현대화, 영업기법 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

- ④ 전국 3만 9천개(03. 9월 기준) 빈 점포를 공익사업, 공동사업, 창업보육 등으로 활용시 지원
- ⑤ 시장상인조직 육성을 통해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상인조직 결성 유도 및 지원

□ 한나라당 주도 특별법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통과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이 2004. 9. 15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음

공정거래법

□ 현 황

▶ 처리경위

○ 법안 제출

- 2004.6.23 정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제출.
- 2004.7.5 정부제출안 정무위원회 회부.
- 2004.8.9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 제출.
- 2004.8.10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안 정무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

- 2004.8.24 전체회의 대체토론1회 실시 (답변 포함 질의시간 15분).
- 2004.8.26 법안심사 소위 1차 심사 : 여·야간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함.
- 2004.9.2 이후 수차례 간사협상 : 여당의 터무니 없는 제안(2004.9.23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 등으로 결렬.
- 2004.9.13 소위 2차 심사 : 국회법을 무시한 열린우리당의 독단적인 회의소집 등 회의절차의 불법성 등의 논란 때문에 심사는 하지 못하고 회의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운영위에 의뢰.
 - ※ 회의절차의 불법성 : 열린우리당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에 근거, 제76조를 준용하여 정무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국회법 해설에 의하면 제76조는 준용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회의소집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없는 회의는 국회법 위반임.
- 2004.9.14 소위 3차 심사 : 회의절차상의 불법성 문제로 인해 한나라당 소속 의

원들은 회의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문제점만 지적하고 퇴장했으나 여당은 단독으로 날치기 소위 진행.

- 2004.9.15 전체회의 :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심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보고.

○ 한나라당 추진 경과

- 2004.9.13 정책 성명 발표 : 졸속법안 처리 반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 (붙임 참조).
- 2004.9.13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요구: 국회 정무위원장 상대.
- 2004.9.14 정책성명 발표 : 졸속 改惡을 중단하고 야당과 경제계의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할 것과 한나라당의 입장 및 대안을 제시 (붙임 참조).
- 2004.9.16 김희선 의원장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 성명문 발표 : 제대로 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혀 없었는지 회의절차의 불법성에 및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내용 등을 조목조목 반박 (붙임 참조).
- 2004.9.17 정책성명 발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재차 발표 (붙임 참조).

○ 여야 대치 및 처리 합의

- 2004.9.16 및 17 열린우리당의 불법적인 법안 날치기 처리 강행 움직임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당과 대치.
- 2004.9.17 여야 합의 : 충분한 논의를 거쳐 11. 12 본회의 처리.

□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적용제외 범위 확대 등)

- 현행 기본틀(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은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 도입과 예외 인정요건을 보완하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 4가지 졸업기준으로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집단을 대상

- 적용제외, 예외인정 변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 BOO방식의 SOC에 대한 출자도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의 악용 방지를 위해 예외인정 요건 강화 등.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현행 30% → 15%로 축소)

- 현행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소유의 국내계열사 (2004.4.1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9개 기업집단 소속 80개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의 원칙적 행사 금지, 예외적 허용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해 의결시)
 - 1986. 12 의결권 행사 전면 금지, 2002. 1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 제기로 현행과 같이 개정.
- 개정안은 예외허용범위를 2006. 4. 25%, 2007. 4. 20%, 2008.4. 15%로 단계적 축소 (여당 단독 소위심사 결과는 2006.4. 25%, 2007.4. 20%로 단계적 축소)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제도입(기간: 3년)

-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2004. 4.1 현재 51개 집단 884개사)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하여 2004. 2.4 시한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제도입
 -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 금융거래관련 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동.
 -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비밀누설시 벌칙강화 등 요구권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 강화.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현행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부채비율 100% 이내 유지, 자회사 이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 금지, 일반자회사와 금융자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 등
-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 (비상장 50%, 상장 30%),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등

-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부채비율 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 (1⇒2년), 지주회사의 전환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하여 인정, 손자회사 보유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 인정(2년),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0% ⇒30%) 등.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개정안 주요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 회사 (금융보험사 제외)에 대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영업양?수도, 회사 합병 및 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일정규모(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 이상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을 담고 있음.

▶ 문학진(열)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판매시장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 포상금 50억원, 부당공동행위 제보 포상금 2억원, 부당지원행위 제보 포상금 5천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등 총 55억 6,400만원의 예산 소요 추정.

□ 문제점 및 한나라당의 입장

〈 전반적 입장 〉

- 이번 개정안은 내수와 투자의 극심한 부진 등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나라당은 친재벌, 반재벌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살리기, 투자살리기 차원에서 법개정 검토
- 신문 포상금 관련 내용은 주요 신문을 겨냥한 언론탄압용이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

1. 출자총액제한의 졸업기준, 예외적용, 적용제외 등

- 정부관료가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모범기업을 결정할 권한과 능력이 없음
- 소유지배 괴리도, 의결권 승수는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지정제외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18개 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전체 출자총액의 54.1%로서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적용제외?예외인정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이미 누더기가 된 이 제도를 더 복잡하고 자의적이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만들 것이 명백함
-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이 22.67%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평균만 보고 개별기업의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
- 공정위의 “출자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에 불과함. 공정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을 왜 제출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며, 또 공정위 스스로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은 없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 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위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정무위 발언 중에서 인용)

▷ 한나라당의 대안

-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 제한 및 관련 법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타회사 출자의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 장치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3년 시한 제도입

- 공정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현행 규제의 적절성부터 검증해야 함
- 공정위가 일부 기업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한나라당의 대안 : 제도입 반대

3.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 정부 스스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설정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열분리청구제는 2년째 논의만 하는 중), 그 하위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부터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 불과함
-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연기금, 산업은행 등의 주식투자,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보유한 기업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려고 하면서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은 큰 모순임

▷ 한나라당의 대안 : 현행 유지

4.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법개정안(포상금제 도입)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은 세계 어느 국가의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도 없는 제도로서 당연위법인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범위반자는 자신의 범위 반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발의안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총 55억 6,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부당공동행위 2억원, 부당지원행위 5천만원, 신문시장 경품 및 무가지 5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억원, 대규모소매점고시 위반행위 2억 1,400만원으로서 명백히 신문시장만 겨냥한 법으로 언론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안이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하나 수년간의 검토를 거쳤다는 정부의 법개정안에는 부당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도입만 포함되어 있어 공정위가 문학진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돌변한 것은 설명할 수 없음

▷ 한나라당의 대안 : 도입 반대

편파방송 현황 및 대책

□ KBS는 국민의 공영·공정방송으로 거듭나야

- KBS는 정부가 출자금(3000억원) 및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임에도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빌미로 1조3200억원의 예산을 정부 감독 및 국회 사전동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지난 6월23일 공영방송 KBS의 최고결정기관인 KBS이사회(이중수이사장)가 TV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광고압력을 넣기 위해 항의방문을 하자며 취재진까지 동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
- KBS는 공영방송으로 광고수익이 감소하자 KBS이사진 등이 방송기자를 동원해 광고압력실력행사를 한 행위는 KBS 윤리강령에도 어긋나며 방송광고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극히 위험한 신권위주의적 행태로 목과할 수 없다고 보고 광고계등의 불만이 팽배함

□ 정부, 친여매체인 오마이뉴스등 정부광고발주 편중 심화

- 최근 친여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노무현정권 출범이후 정부발주 인터넷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 인터넷 광고의 오마이뉴스 편중은 올들어 더욱 심해져 지난 8월까지 뉴스사이트 전체에 대한 정부광고 발주액(5억3880만원)의 20.7% 1억1135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도 오마이뉴스의 정부광고 수주액은 825만원으로 정부뉴스 사이트 광고 총액(3억4256만원)의 2.4% 불과했으나 참여정부출범이후 급성장한 것으로 드러남

- 김강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친노 인터넷 라디오방송국 “라디오 21”에는 2003년도 정부광고 4970만원중 2000만원을 지급함
 - 정부에 비판적인 사이트에는 광고를 줄이고 친여성향 사이트인 “오마이뉴스”와 라디오 21 등은 광고 발주를 늘리는 등 정부의 광고 발주가 형평성을 잃은 편향된 처사로 규정하고 언론계 등에서는 반발이 거세짐.

□ SBS 등 민영방송 길들이기 중단해야

-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과정에서 지난 14일 SBS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정하고 해당 방송사에 소명차원의 의견 진술을 요구함
 - 방송계등은 이번 방송위 심사과정이 최근 여당과 시민단체등과 함께 추진중인 방송법 개혁(안)과 일치하고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최근 여당은 언론개혁을 빌미로 언론사 소유기본제한과 방송사의 소유와 경쟁분리등을 명분으로 유력 신문사 및 SBS방송사를 정부여당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사전조치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
 - 우리당은 민영방송장악음모진상조사단(고홍길의원)을 구성해 방송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향후 2차방송위원회 최종심사결과발표시까지 진상조사 등 활동계획을 유보키로 함.

교육대책

2008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 혼란

■ 개 요

- 교육부는 현 중3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 주요 내용은 수능을 9등급으로 하여 비중의 약화, 내신도 9등급으로 하고 상대평가 도입으로 내신 비중 강화
- 특목고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진학에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연의 기능 회복

■ 주요 쟁점

- 고교 등급제 논란
 - 현실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지역 학교 학생의 역차별 논란 야기
- 수능 무용론과 본고사 부활 논란
 - 수능의 변별력 약화와 학교간 학력차 불인정 시 대학의 본고사 부활 요구 대두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피현상 발생 우려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의 경우 내신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기피현상 심화 우려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과 상치

- 사교육비 경감 효용성 논란
 -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내신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우려
- 최근 전교조의 대학 고교등급제 적용 의문 제기로 논란 확산 중

■ 당 입장

-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9월 중 확정발표키로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어 국민적 혼란 야기에 대한 비판
 - 학부모와 학생은 설익은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님.
- 기본적으로 대입은 대학의 자율화에 일임한다는 대 전제 아래
 - 고교등급제는 획일적인 성적순에 의한 한줄 세우기는 반대하되, 학교별 다양한 특성을 대학이 인정하도록 하고
 - 동시에 대학이 다양한 선발기제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
 -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의 경우 기조는 유지하되,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등으로 학교의 선택권 보장 등 보완 병행
 - 장기적으로 대입제도는 본고사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이 바람직

국민연금개선방안

— 기초연금제 실시로 전국민 연금 혜택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47년 기금고갈 추정,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강조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9%로 인상하고, 연금급여 수준은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
- 정부 개정안은 국민연금 문제(연금 사각지대 확대, 재정불안, 세대간·지역간 형평성 등)의 근본적 해결방안보다는 연금재정의 안정화 측면만 강조
 - * 지역가입자의 48%가 납부예외자로 반쪽 형태의 기형적인 연금구조

□ 당입장

- 국민연금 개선안(기초연금제 도입) 마련, 정기국회 제출

< 핵심 내용 >

- 【1인 1연금 원칙에 입각한 기초연금제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 “소득있는 자에게서 연금을”에서 “소득없는 자에게도 연금”로 국민연금제도 근본적 구조 변화
 - -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평균소득의 20%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최저생계보장
 - * 기존 공적연금제도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 연금 지급
 - 소득비례연금을 병행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의 강제가입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7%로 인하됨으로써 서민부담 경감 효과
 - 맞벌이 가구는 현행보다 급여액이 줄어드나 홀벌이 가구는 현행 60% 유지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입장 고려

참고자료

- (1) 악화된 민생지표 및 서민생활지표
- (2) 노대통령 헌정혜손 발언록
- (3) 노정권 실정 비판 연설 참고자료

[참고자료1] 악화된 민생지표 및 서민생활지표

(1) 2003년 저소득층 실질가처분 소득 감소

- 2003년 저소득층의 월평균 실질가처분소득은 89만원으로 1997년 수준(9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8.2% 감소함
- 2004년 2/4분기의 경우 전국 가구의 27.7%가 적자로 운영됐으며 하위 30%의 50.3%가 적자 상태

(2) 2003년 실업급여 인정자 외환위기 이후 최다

- 2003년 실업급여 인정자는 375,561명으로 전년(297,109명)보다 26.4%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434,199명)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3) 2004년 체불임금 환란이후 최대수준

- 2004년 7월 현재 체불임금은 6,143억원으로 99년(5,704억)이후 최대를 기록
- 2004년 7월말 현재 체불임금 해당금은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878억원이 22천명에게 지급됨(1인당 평균 360만원)

(4) 신용불량자 사상최대

- 2004.5월 신용불량자 399만명으로 사상최대(세금채납자 포함한 사망자 정리전 기준)
※ 노무현 정부 출범초인 2003년 3월 295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

(5) 개인파산신청자 사상최대

- 2003년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 3,759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인 3,856건에 달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말이면 사상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에 머물렀던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2003년에는 3856건에 이르는 등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추세

(6) 2004년 법원 경매매물 급증

- 2004년 8월 법원 경매매물은 40,801건으로 2003년 동기(20,226건)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7) 국세청 세금채납 압류재산 사상최고

- 2004년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임한 세금채납자들의 압류 재산 수임건수는 6,6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17건)에 비하여 60.4%가 증가하여 사상최대치를 나나타고 있음

(8) 국민연금 미납금액 사상최대

- 2004년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미납금액은 3조9,341억원으로 사상최대 수준이며 이는 98년말(3,299억원)에 비하여 11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9) 건강보험 채납액 사상최대

- 2004년 6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채납액은 1조4,432억원으로 사상최대 수준이며 이는 98년말(6,221억원)에 비하여 2.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10) 전기요금 연체가구 사상최대

- 2004년 6월말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가구 수는 893,272호로 사상최대 수준이며 이는 98년말(586,614호)에 비하여 1.5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11) 2004년 서울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99년 이후 최고

- 2004년 7월 현재 서울시의 상수도요금 미수납 액은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증가하였으며 이는 99년(114억) 이후 최고 수준임

(12) 가짜실업자 사상최대

- 2004년 상반기 부정실업급여 수급자는 2,840명으로 전년 동기(2,450명)에 비하여 16%증가하여 사상최대를 나타냄(반기기준)
* 최근 3년간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수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수준임.

(13) 2004년 상반기 소주출하량 99년 하반기 이후 최대

- 경기침체로 쓰린 가슴 소주로 달렸는지 2004년 상반기 소주출하량은 총54만9,000kl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만4,000kl에 비하여 6.6%증가하였는데 이는 반기기준으

로 99년 하반기 55만2,000kl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임. 반면 맥주와 위스키 등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함

(14) 2003년 노역 수형자 급증

-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때우는 수형자들도 급증하였는데 2003년 노역수형자수는 11,073명으로 98년(5,166명)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15) 2003년 경제범죄 크게 상승

- 2003년 사기범죄는 231,951건으로 2002년(183,327건)에 비하여 26.5%나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 그리고 2003년 절도죄의 경우도 187,325건으로 전년도(178,457건)에 비하여 5.0%늘어나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나타내었음

(16) 2003년 이혼건수는 2002년에 비하여 15.0% 증가

- 2003년 중 총 이혼건수는 167,100건으로 2002년(145,300건)보다 15.5% 증가
- 이혼 사유 중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4.2%에서 2003년에선 16.4%로 3.9배 증가

(17) 2003년 자살인구 13,005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10.2% 증가

- 2003년 자살인구는 13,005명으로 2000년(11,794명)에 비하여 10.2% 증가
- 자살사유를 살펴보면 전체자살의 53%가 빈곤 또는 비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노무현정부 민생지표 최악의 신기록들

쏟아지는 각종 민생관련 신기록들 속에 국민들의 삶은 날로 고달파지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를「강 건너 불 보듯」하면서 과거사정리, 「국가보안법」폐지문제 등으로 국민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

□ 국민부담 관련 신기록들

(1) 국민부담액 사상최대

- 2003년 국민 부담금은 세금 147.8조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9조원 등 18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721.3조원의 25.5%를 기록했으며, 1인당 국민 부담금은 38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74.1% 늘어나 사상최대치를 기록함.
- 1998년 대비 2003년 현재 국민부담액은 80.3%(98년 101.9조원→2003년 183.7조원) 증가 했으나 국민소득은 49.0%(98년 484.1조원→2003년 721.3조원) 증가에 그침.

(2) 각종 부담금 사상최대

- 2003년도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대비 1조 3,711억원 늘어난 8조 8,193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 1998년 대비 2003년 현재 부담금은 137.8%(98년 3.7조원→2003년 8.8조원) 증가 했으나 국민소득은 49.0%(98년 484.1조원→2003년 721.3조원) 증가에 그침.

*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조세외의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을 말하는데 부담금의 귀속주체는 중앙정부(기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등이 있음.

(3) 국가직접부채 사상최대

- 2003년말 국가직접부채는 166조원으로 1997년말(60조원)보다 2.8배 폭증
- 특히, 방만한 재정운영이 현재처럼 계속된다면, 2008년에는 중앙정부채무만 최소 237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이렇게 되면 1997년말(50조원)보다 무려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한국개발연구원 대외비보고서)

(4) 가계부채 사상최대

- 2004.6월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458.0조원으로 1997년(211조원)보다 2배 이상 폭증하여 가계부채에 따른 국민파산시대가 눈앞에 다가옴
- 1가구당 가계부채 역시 2,994만원으로 1997년 1,560만원보다 크게 증가함

(5) 미래국민부담액 사상최대

- 2004. 6 감사원의 공적연금제도관련 감사보고서에 의할 경우 2002년도 12월 현재 공무원연금(154조원), 사학연금(17조원), 군인연금(11조원) 등 3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182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상기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226조원 *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총40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년 정부 일반회계예산(118조원)의 3.4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미래 국민 부담액임.
- * 순천향대 김용하교수(공적연금의 재정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거시경제 지표 관련 신기록들

(1) 잠재성장률 사상최저

- 1980년~1990년대 7%~8%대 수준이었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4%대로 추락하였고, 향후 우리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진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착화되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됨(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12월)

(2) 2003년 환란이후 최악의 경제성장

- 2003년 경제성장률은 3.1%로 1998년 'IMF 충격'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최악의 경제성장이며, 세계경제의 호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증가율(1.8%)

모두 사실상 뒷걸음질친 것

(3) 2003년 청년 일자리 19만개 감소

- 노무현정권은 불과 집권 1년('02년말~'03년말)만에 일자리를 3만개나 줄여놓았으며, 청년 일자리는 19만개나 소멸케하여 1998년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음(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버린 최초의 정권)

(4) 2004년 계속 늘어나는 국내자본 해외유출

- 2004년 중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비를 합친 여행수지 대외지급액은 65.2억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증가하였음. 동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7.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금년 들어 매달평균 1조원의 국내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 * 경기침체 속에서도 7월말까지 해외여행자수는 465만명으로 지난해 동기(334만명)보다 39.2%나 증가하는 등 사상최대치를 기록함.
- 국내채권금리하락의 영향으로 2004년 상반기 중 내국인(금융기관 포함)의 해외 중장기채권투자는 30.5억불로 전년 동기(21.8억불)대비 40%나 증가함.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한달간 무려 12.7억불의 자금이 해외 중장기채권 매입용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는 월간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임.

(5) 2003년 외국인투자규모 97년 이후 최저 수준

- 2003년 외국인투자 규모는 65억달러(당해연도 신고기준)로 2002년보다 28.9% 감소해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03년 외국인투자는 17억달러인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30억달러에 달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6) 2003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시설자금 대출비중

- 2004년 상반기 산업대출금총액에서 시설자금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2003년 상반기(20.1%)에 비하여 0.5%p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7) 2003년 제조업 설비투자 환란이전의 62.5% 수준에 불과

- 총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 4,622개의 지난해 업체당 평균 유형 자산 구입액은 72.3억원으로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4-97년 평균치인 115.7억원의 62.5%에 불과
- ※ (5)~(7)번 항목은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이고 국내기업들의 국내투자 역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입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액 보다 많아 우리나라가 현재 심각한 산업공동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8) 2004년 7월 제조업 가동률 10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

- 2004년 7월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79.4%로 추락
- 2004년 7월 중소기업 가동률은 67.9%로 1년 6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9) 2003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98년보다 하락

- 2002년 10.2%를 기록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노무현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는 5.4%로 급락함
- 2003년 이자보상비율은 255.9%로 2002년에 비해 오히려 17.8%p 하락함
- 특히, 2003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6%로 1998년(5.2%)보다도 0.6%p 하락함.

(10) 2003년 도소매 판매지수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

- 1999년 이후 6.6%~13%의 증가추세를 보이던 도·소매업 판매지수가 2003년에는 1.3% 감소세로 반전

(11) 소매업매출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 2004년 7월 현재 소비의 척도인 음식료품 등 소매업 매출이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도 9.6%나 줄어 사상최악의 감소세를 기록

(12) 서비스산업 감소 폭 1999년 1월 이후 최고

- 2004년 7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여 1.2% 감소해 99년 1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1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추락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형편지수

- 국민들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는 2002년 98을 정점으로 2004.2분기에는 69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어려운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
- 특히,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치 역시 2004.2분기에는 80으로 당분간은 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14) 2003년 고통지수 2002년보다 악화

- 2003년 고통지수는 16개 광역지자체의 절반수준인 8개 지역에서 2002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특히, 부산(2.0P)과 광주(2.1P), 경기(1.8P), 충북(3.3P) 등이 상대적으로 고통지수가 크게 악화됨

(15) 2004년 각종 물가는 급등추세

- 2004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4.8%올라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04년 8월 생활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6.7%올라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04년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7.5%올라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16)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

- 2002년 8.25배 수준 이었던 10분위 소득배율이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인 2003년에는 오히려 8.93배로 확대
- 또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의 적자율도 1998년 7.6%에서 2003년 14.8%로 크게

악화된

※ 연도별 중앙정부채무의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기준)	1997년 대비 2004년 (예산)
중앙정부채무	50	71	88	101	113	127	159	183	3.6배 증가
GDP 대비 비율	11.0%	16.0%	18.2%	19.3%	20.4%	21.3%	25.2%	26.9%	15.9%P ↑

[참고자료2] 노무현 정권 헌정 훼손 관련 발언록

□ 국가보안법(국가정체성 훼손 등) 관련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게 낫다?
“(북한에) 더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9전쟁이 나서)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 (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담회)
- 한총련 합법화 발언
– “어제는 TV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됐더군요. 아직도 불법 단체인가요?” (2003년 3월 1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 공산당 허용 발언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2003년 6월 9일, 일본 중의원 의장 주체 간담회)
- 모택동 존경
“중국 모택동, 덩소평을 가장 존경한다.” (2003년 7월 9일, 중국 칭와대 연설 중)
- 8.15 행사시 애국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을 소각한 행동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를 수용
“그동안 남북 관계가 적대적이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대화하는 상황인데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3년 8월 19일, 수석보좌관 회의)
- 송두율 교수 편들기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교수 처벌과 수사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으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2003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

-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남북 지방 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 연합”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2004년 2월 24일 통일수도 관련)
-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행위
용산 기지를 가리켜 “간섭과 침략의 상징”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 (2004년 3월 1일)
- 이종석 NSC 사무처장
장성들 대상 특강에서 “병사들에 대한 대북 적대감 고취 자제” 주문 (2004년 6월 19일)
- 의문사위
간첩·빨치산 활동 비전향장기수 민주화 운동 기여 인정 (2004년 7월 1일)
-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 검토 (2004년 7월 14일)
-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 간첩죄 실행 직원 조사관 채용 사실 확인됨 (2004년 7월 15일)
- 대통령, NLL 침범 북한 경비정 격퇴 사건 관련 공개조사 지시
- 침범 북한 경비정은 서해 침범 국군희생시킨 당시의 그 배와 같은종류의 함선.
(2004년 7월 16일)
- 김현미 대변인
남북 평화체계를 가버이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당국의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 (2004년 7월 19일)
- 대법관 제청 자문 위원회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침해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 춘천지법원장 항의 시위. (2004년 7월 27일)
- 노대통령,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독재 시대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할 것”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2004년 9월 5일, MBC 2580 대담)

□ 노무현 정권 헌법 정체성(법률 및 헌법 수호 의지 관련) 훼손

→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법률 부정

-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1988년 12월 26일,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
- “내게 법, 법 하지 말라. 내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
(2000년 6월, 노대통령 부산시장 선거 당시)
- 재신임을 물겠다면 12월 15일 국민투표 실시 제안.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2003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
-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노사모가 나서달라”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 총선관련 발언)
-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 (2003년 12월 24일)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2004년 2월 24일)
-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 지원하겠다.”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경고)

-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 2003년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재신임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 가능할 것” (2004년 6월 18일, 기자간담회 행정수도 이전 관련)
- 대법관 제청 자문 위원회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침해. 강병섭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이영애 춘천지법 원장 항의 사퇴. (2004년 7월 27일)

[참고자료3] 노정권 실정 비판 연설 참고자료

◆ 경제불안

〈민생경제 이렇게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재래시장은
가게세 안 받을 테니
제발 가게문만 닫지 말아달라 사정 한답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분들은
멀리가는 손님이 거의 없어 ‘마을택시’라고 하고 수입도 100만원 악뎡이어서
아르바이트 수준이라고 한숨을 쉽니다.

동네식당의 한 아주머니는
80만원 월세도 못낸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기가막힌 불경기입니다.
생활고를 비판해 최근 자살한 사람이
만5천명을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슴아픈 것은 어린 자식들에게
가난의 고통을 물려 줄 수 없다며
가족이 동반해서 자살하는 가정이 늘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카드빚, 중소기업자금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업하다 부도가 나 겨다니던 아들이
장례식 참석도 못하고
밤에 어머니 묘지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져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말은
가슴미어지는 살인적 경기불황의 한 단면입니다.

서민들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전부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기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된지 1년만에 작년 한해 동안
재산이 4억이 늘었고 그 중에서
월급타서 저축한 것만
1억 6천만원이라고 재산신고 했습니다.

대통령 수입이 이렇게 좋은데
서민들 경기어렵다는 말
노대통령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 통반장, 시골 이장반장도
주민들이 살기힘들어 하면
면사무소에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강구를 호소합니다.

하물며 대통령과 집권당 실세들은
아무리 자기 배들 부르다고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배고프다고 하는데거짓말 한다고
억박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희망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죄인취급받으며
국내있기 싫다는 듯이
저마다 외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80%이상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연봉 많이 받는 대다수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봉급 태반은 외국에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골프채 들고
외국여행 나갑니다.

돈 가진 사람들 죄인 취급하는 정권에서
수모 당하면서
돈 쓰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고용이 제대로 창출 되겠습니까?
번 돈이 없는데 소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입니다.
지금 경제 나쁜 것
모두 대통령 책임입니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경제가 좋다고 오판하는 것
세계가 실패한 좌파정책을 맹신 하는 것
모두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불안

〈우리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것인데
경제가 위기 아니라고 뻑뻑 우겨대니
대책인들 정확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세계시멘트의 절반, 석탄의 1/3
철강의 1/4을 소비하고 있고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이
앞다퉂 투자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62억불
외자를 유치 했을 때
중국은 1300억 불을 유치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 특수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IT로 경쟁하는 시대 입니다.
IT는 영어 쓰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입니다.
우리에게 한 수 배우던 나라들이
지금은 한국을
경쟁상대에서 제외시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포항공대, 서울공대
머리 좋은 이과생들이
휴학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기 위해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수백만 청년 실업자들이
대낮이면 PC방에 북적거립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서류 복사심부름에나 매달려 있습니다.
유능한 과학자들 상당수가
대접받지 못한다며
외국으로 줄줄이 떠난다고 합니다.

나라의 성장동력이 멈추고
청년들이 노는 나라
이래가지고 이 나라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노무현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 무관심 때문입니다.

〈대통령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대다수의 삶이 이지경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것
좌익 독립운동가 발굴하는 것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 색출하는 것

6.25 전쟁통에 국군, 경찰, 미군
문제점 색출하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공산당 허용하는 것
 간첩과 빨치산 등 국가체제 반대자가 대접받고
 좌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혹시 그것이 노대통령의 소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연히 그것들도 논의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파탄난 민생경제 살리는 것 보다
 더 급하고 더 절실한니까?

대통령이 만나서면
 그 일이 논쟁도 안되는 일 입니까?

◆ 안보불안

〈안보 정말 걱정입니다〉

간첩혐의 복역자가
 의문사위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국군기무사령관을 소환하고
 국방기밀을 맘대로 열람 하고
 간첩과 빨치산 활동자를 민주화유공자라고 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복송을 주장하고
 의문사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노동자 시위현장에
 화염병을 대신 날라다 주다가 들켰습니다.

국가원수이자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각별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이들 의견을 존중한다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과거사 규명의 실체가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노 대통령은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좌익 독립운동가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좋자고 하는 것 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득보고
 기뻐 할 사람 누구 입니까?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 그리고
 국가전복과 체제부정 위해 일하다 구속됐던 사람들
 노사모 제외하고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기막힌 말씀 좀 더 들어보십시오
 청와대 고위인사가 장군들에게
 사병교육시킬 때 적개심 고취말라 당부했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올 가을이면 ‘주적’을 삭제합니다.

군대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상의도 없이 감축을 단행했고
 총지휘자도 일본주둔 미군으로
 넘어 간다는 것이고
 이미 국내에서도
 전방에서 철수하거나 이미 철수 했고
 한강 이남으로 아예 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NLL을 불법 침범해

총한방 안쏘고도
우리 국방부장관과 북한군 정보 최고 전문가를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보고체계 관련
노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우리 군을 질타해
사기를 저하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에 판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적발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당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에 관한한 끝까지 채길 것입니다.
다 양보한이 있어도 경제와 안보
이 두가지는 절대 양보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 못하지만 특히
경제와 안보 이 두가지는 더더욱 실패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 힘들게 했지만 특히
서민과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정당은
한나라당 뿐입니다.

〈따져보자〉

북한은 두 얼굴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교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이를 인정하고
6.15회담도 새롭게 평가하고,
금강산도 방문하고
만화협도 참여하고
북한주민 배고픔 해결하는
40만톤 곡식 보내기도 찬성하고
용천사고 돕기 앞장서고
개성공단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적 걱정거리인
핵개발을
끝까지 포기 않고 있습니다.

인민군은 여전히 강성입니다.
체제반대자를 여전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강도 폭발사고가 나도 몇일씩 무슨일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정보가 어둡습니다.

인도적인 것은 인도적인 것대로 교류하고
군사적인 것, 체제안보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존재해야 합니다.
나라를 전복하겠다는 사람들 빼고
지금 이시대에
보안법있어서 불편한 국민 어디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대통령에게 돌던지는 사람 없다고 대통령 경호법
폐지하자면 하겠습니까?

국가안보든 대통령 경호든
만에 한번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친일법 만들어서
박근혜 대표 공격하려했습니다.

독립군 자손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이
큰 소리치던 열린우리당내에
친일인사 후손들 득실 거린다는 사실
국민들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변명대로 하자면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친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일도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조상들 친일혐의를 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상규명은 하되
정권의 입맛에 맞게 관제역사를 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학자들에게 맡기고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공개 말자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자, 캐보자〉

한나라당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없이

연좌제 안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인권 존중하지는 정권이
인권유린하고
법을 존중한다는 정권이
법질서를 파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 때
미군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중공군에게도 죽었고
경찰과 국군에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인민군과 빨치산, 남로당에게 죽은
억울한 죽음도
같이 조사하지는 것이 한나라당 안입니다.

일본 침략이 없었으면
친일파가 있었을리 없고
북한 남침이 없었다면
민간인 학살도 있을리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침략원인과
사실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입장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 반대도 심하고
실현 가능성도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안을 제시 한 것입니다.

수도이전은 반대지만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집중을 분산 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을 야당이 내 놓은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지요

한나라당이 먼저
상생을 꾀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경제관련 해 한나라당이
발목잡았거나 무작정 반대한 것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공정거래법 몸으로 막은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가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한나라당 뜻입니다.
재벌을 비호해서 지금
후원금 한푼 받을 수 있는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아닙니다.

◆ 외교불안

〈노무현 정권 외교가 없다〉

지금은 국제경쟁력 시대입니다.
외교가 곧 국력이고 경쟁력입니다.
노무현 정권 외교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한미 관계 이상 없다고 하지만
진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노무현 정권은 반미 촛불시위 덕택에
집권에 성공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격훈련 중인 미군장갑차를

대학생들이 점거한 농성도 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집권당이 반대했었고
북한인권예 대한 미의회 결의에
집권당이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주다, 동맹이다,
할말 좀 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미군감축 발표가
상의도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양강도 폭발에 대한 정보교환도
잘 안됩니다.

부시 연설에서 파병국 나열에
한국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신기남, 정동영의원이 다녀 왔지만
미국에서 특별하게 만난 사람도
한미간 꺼끄러움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미관계 분명히
예전같이 원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진찍으러 미국가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아니었으면 포로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첫날은 머리로 다음 날은 가슴으로
미국에 감동했다 했습니다만
뒤늦게 아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과는 원활하냐?

일본과 무역역조가 사상 최대입니다.

일본은 한국 침략을 해방전쟁이라고 교과서에 씁니다.

일본수상과 장관들이 전범 시당

신사 참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중

과거사를 거론 안하겠다고 자청하고

독도를 일본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일본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외신기자들 앞에서 아부했어도

실리외교 결과는 뺑점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여타 다른 나라도

저자세 비굴외교는 눈에 띄어도

당당한 자주 외교는 별로 안보입니다.